

| 기획재정부 |   | 보도자료 |                               |
|-------|---|------|-------------------------------|
| 보도일시  | 배포시                                     | 배포일시 | 2021. 10. 22.(금) 08:30        |
| 담당과장  |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br>김귀범 (044-215-2830)      | 담당자  | 김금비 사무관 keumb@korea.kr        |
|       |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br>김승태 (044-215-2770)      |      |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
|       |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장<br>박지훈 (044-215-4570)    |      | 김애리 사무관<br>arkim0814@korea.kr |
|       | 기후대응기금추진단 추진총괄과장<br>류승수 (044-215-4940)  |      | 김상엽 사무관<br>ksy7715@korea.kr   |
|       |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br>이보인 (044-960-6160) |      | 최형석 서기관<br>hyungchoi@korea.kr |
|       |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장<br>김상훈 (044-960-6180) |      | 신대원 서기관<br>recallme@korea.kr  |
|       |   |      | 한상운 사무관<br>hansy@korea.kr     |
|       |   |      |                               |

## 제목 :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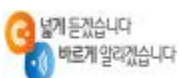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22(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②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 ③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④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환경부, 제목만 공개)
- 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        |        |       |
|-----------|--------|--------|-------|
| 금융분야      | (금융위)  | 해운분야   | (해수부) |
| 소상공인·중기분야 | (중기부)  | 환경분야   | (환경부) |
| 관광분야      | (문체부)  | 디지털분야  | (과기부) |
| 외식분야      | (농식품부) | 행정분야   | (행안부) |
| 수출입분야     | (산업부)  | 공정거래분야 | (공정위) |
| 고용분야      | (고용부)  | 통계분야   | (통계청) |
| 교통분야      | (국토부)  |        |       |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 【 개최배경 】

제36차 정책점검회의<sup>1)</sup>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계경제는 공급과잉을 걱정해왔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 되면서  
“Shortage economy”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sup>2)</sup>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비해  
그 간 생산에 대한 투자부진, 자연재해,  
산유국들의 생산제한 등으로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국가간 인력이동이 제한되고  
구인난 심화 등으로 국제 운송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물류 차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 The Economist('21.10.9): The shortage economy

나아가 적극적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거대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부분의  
구조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지난 10.18일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미래상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하였고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열·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 ①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
- ②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
- ③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
- ④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점검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불대 초반을 기록 중<sup>3)</sup>입니다.

동절기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도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20년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불<sup>4)</sup>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  
천연가스수요가 석유수요로 전환되면서  
유가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월 8천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중이며  
금년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완료하여  
총 1억배럴을 확보<sup>5)</sup>하였습니다.  
천연가스도 장기계약 비중이 80%내외에 달하고  
사용량의 50%인 발전용은 他 전원 사용을 통해 감축 가능하여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두바이유(\$/B): ('20)42.3 ('21.1월)53.8 (6)71.6 (7)72.9 (8)69.5 (9)72.6 (10.19)83.0

4) 천연가스(JKM, \$/MMBtu): ('20)4.33 ('21.1월)16.92 (6)12.00 (7)14.10 (8)17.04 (9)24.70 (10.19)35.31

5) '21.8월 기준, 정부+민간 총 205일치 비축물량 보유(정부 106일, 민간 99일)

다만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 】

두 번째 안건은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 증가에 대응하여

① 총 74척의 임시선박 투입('20.8~'21.9),<sup>6)</sup>

② 총 1.3만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박 제공('20.11~'21.9),<sup>7)</sup>

6) ('20.8~12) 월평균 2.2척 ('21.1~4월) 매월 4척 (5월) 6척 (6월) 6척 (7월) 10척 (8월) 12척 (9월) 13척

7) ('20.11) 미주 350 → ('21.5) 미주430, 유럽 50 → ('21.9) 미주 1,130, 동남아 120, 유럽 50 (단위: TEU)

③ 총 263억원의 물류비 지원('21) 및 1,500억원의 금융 지원('21.9~)<sup>8)</sup>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주항로에 15.5만 TEU를 수송('20.8~'21.9)하여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7만 TEU)의 74.9%를 해소하였고, 극적선사 수출물량('21.1~9)도 미주항로, 유럽항로는 전년 대비 각각 40.6%, 92.9%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 운임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sup>9)</sup>, 미국·유럽의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미국 LA·롱비치 항만 인근에 선박 150여 척이 하역 대기<sup>10)</sup>하는 등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첫째,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10월에 8척을 투입한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의 임시선박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고,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21년 미주노선 극적사 화물기 운항을 10,000편 이상으로 증편<sup>11)</sup>하겠습니다.

---

8) (예산) 수출바우처 60억원, 온라인공동물류 40억원, 마케팅예산 21억원, 물류전용 바우처 142억원 (금융)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수은 수출촉진자금 300억원, 물류비 특별용자 200억원

9) 상하이운임지수(SCFI) : ('20.1)999 → ('21.1)1,050 → ('21.1)2,872 → ('21.4)2,830 → ('21.7)4,037 → ('21.10)4,588

10) LA·롱비치 항만 대기 선박(척) : ('21.1.11)98 → ('21.3.8)101 → ('21.5.14)100 → ('21.7.12)101 → ('21.9.25)161 → ('21.10.18)157

11) 화물기 운항편수(마주) : '18년 5,103편 → '19년 4,291편 → '20년 7,598편 → '21년 1~9월 8,746편

둘째, 중소기업 선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주항로에 월 200TEU 수준으로 운영중인  
신선 농식품 전용 선복을 11월부터 호주向 선박에  
36TEU 추가 배정하여 총 236TEU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물류비·금융 지원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물류비 예산 총 263억원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은 수출촉진자금 대출 등은  
홍보 강화, 지원요건 완화<sup>12)</sup>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물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는 10~20%의 낮은 비용으로  
수출기업이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22.1), 바르셀로나·자바('22.上) 등  
물류 수요가 높은 곳에 조기 구축하고,  
10월말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대상 20TEU 규모로 미주 서안向 해상운송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통해  
수출입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2) 수은 대출 지원대상 확대(수출운임 상승→수출입운임 상승) 및 지원기준 완화(운임 상승 50%→20%)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 】

세 번째 안건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 및 정책대응방안입니다.

지난 월요일(10.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감축목표가 '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기존 26.3%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2030 NDC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예산안의 탄소중립 분야 재정지원을

'21년 7.3조원에서 '22년 11.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2년 2.5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중심<sup>13)</sup>으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 측면에서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R&D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13) 기후대응기금 지원분야('22 정부안): 온실가스 감축(0.9조원), 신유망·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0.7조원), 공정한 전환(0.2조원), R&D 등 기반구축(0.6조원) 4대분야 지원



탄소중립 실현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핵심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강·화학 등 탄소多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sup>14)</sup>에 추가하여 R&D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22년 0.5조원의 예산을 마중물삼아 약 7.6조원의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금년중에 마련하여,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 NDC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기업·지역·노동자가 낙오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전환·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9월초 출범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sup>15)</sup>’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개정,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4)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우대공제율 적용 →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계 수요가 큰 탄소중립기술 반영 예정 (~'22.1/4)  
(적용 공제율: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0~30%, 대기업 20~30%)

15)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기재부1차관(단장) + 관계부처 1급' 회의체로 출범('21.9.7일)

## 【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네 번째 안건은 수열에너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간 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투자 및 정부 지원이 확대된 결과  
최근 3년 연속으로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sup>16)</sup>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열에너지는 대규모의 열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6월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 후,  
올해 3월에는 4대강 수제법 및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열에너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국산화,  
제도적 기반 확충 등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수열에너지의 확산과 산업화를 본격화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일대에 총 사업비 3,040억원 규모의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신산업 집적단지 등을 연계하여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 재생에너지 목표/실적(GW) : ('18) 1.7 / 3.4 → ('19) 2.4/4.4 → ('20) 4.2/4.8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요소기술에 대한  
23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수열설비 현장에 대한 국산제품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로건축물 인증 기준에 수열을 포함하고,  
수열에너지 성능시험 기준 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함으로써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해나가는 한편,  
댐·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 기반의 집적단지를 지속 발굴·확대하여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 【 마무리말씀 】

민관합동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정제의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금년도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